

# “신천지 개입 의혹 근거 즉시 공개해야”

민주 이성윤·최민희·한민수 의원, 김 전 총리 향해  
“못할 경우 당원들께 사과 후 당대표 후보직 사퇴해야”

“반명·분열주의·신천지 삼자연합 깨는 것이 본질”  
김 전 총리, 서울시의회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최민희·한민수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전 국무총리)를 향해 “신천지 개입 의혹의 근거를 즉시 공개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당원들에게 사과한 뒤 당대표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세 의원은 김 후보가 전당대회 예비경선 연설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자신 있다면 뜯어헤쳐 말고 지극히 당장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신천지 관련 의혹으로 당원명부가 압수 수색되는 등 실제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김 후보의 근거 없는 주장은 민주당 또한 신천지와 연관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본인의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민주당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위헌 정당으로 몰아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죽제의 장이 돼야 할 8·17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단계부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 의원은 특히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시절 신천지 특검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여러 특검 추진 과정에서 파견 검사 부족

등의 사정으로 김·경 합동수사본부 가 수사를 맡는 방향으로 당·정·청이 조율했던 사실을 김 후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적절할 시기에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변죽만 울리는 태도에 불과하다”며 “근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국민과 당원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당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김민석 후보는 민주당과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당대

표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7월 21일 서울시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삼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신천지는 비유법이 아니라 실제법”이라면서 “신천지 문제를 아주 구체적이고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최민희·한민수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직에 도전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해 ‘신천지 개입 의혹의 근거를 즉시 공개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당원들에게 사과한 뒤 당대표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800조 반도체 협력사, 전북이 품어야’

민주 정동영 의원, 전주·새만금 ‘피지컬 AI 연계특구’ 제안

정부가 957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장관 겸임)이 전북을 피지컬 AI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22일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입지는 정해졌지만, 실제 산업을 완성할 협력사 생태계의 집적 공간은 비어 있다”며 “800조원 규모 반도체 산업의 협력사를 전북이 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 특구법’에 ‘협력사 집적형 연계

특구’ 조항을 신설하고, 전주·새만금을 1호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대규모 앵커 투자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결된 협력사 집적지를 별도 특구로 지정해 세제·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현재 메가 특구법은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법이 완성되기 전인 지금이 전북의 역할을 법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아니라 조문 한 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주와 새만금의 역할도 구체



적으로 제시했다. 전주는 로봇 학습 데이터, 안전·보안·성능 인증 국가표준을 총괄하는 ‘피지컬 AI 컨트롤타워’를 맡고 새만금

은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와 7만1,000명 규모 고용 계획을 기반으로 로봇 양산과 실증을 담당하는 ‘생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전주 기준을 설계하고 새만금이 이를 현실로 구현하면, 궁극적으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자율제조(다크 팩토리) 체계로 연결된다”며

“전북이 글로벌 피지컬 AI의 메카가 되고, 전주는 그 중심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가 따로 존재해서는 완성될 수 없다”며 “이들을 하나로 연결해 실제 제품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고리가 바로 전북”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업 추진 속도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AI 경쟁은 선점이 성패를 좌우하는 국면”이라며 “통상적인 예산 절차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속 예타 특구 특례 등 국가 차원의 패스트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주·전북에 대한 전략적 지원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의회 교육위, 전북교육청 공유재산계획 ‘제동’

행정국·감사관 업무보고 청취... 4건 의안 심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공유재산계획안 등 보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21일 오후 행정국 및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교육청이 제출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방학 기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통과된 시설 예산이 다수 있었음에도 현재 실제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을 지적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공약 사업이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과부하로 공정률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요 정책 추진 시 학교 현장이 충분히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유연한 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영국 의원(전주4)은 인사와 학생 배치, 통학지원, 시설안전 등 행정국 업무가 학교 운영의 핵심임에도 업무 보고가 회의 개최 횟수와 예산 집행률 등 공급자 중심의 성과에 치우쳐 있다

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 의원은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 체계 마련 △수요자 중심의 사업 지표 전환을 요구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공약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지원 사업은 정확한 비용 추계와 정책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통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익산)은 정부의 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학교를 에너지 자립학교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2024년 추진되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이 교육감 권위 사태 등으로 동력을 잃고 중단되었던 점을 짚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교육청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폐교 활용 사업이 개별 지역교육지원청 주도로 추진된다 보니, 도교육청 차원의 일관된 추진 로드맵과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족할 실정”이라며, “오는 9월 공모 신청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주도하여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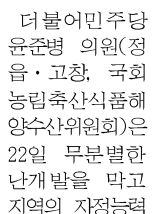
한편 교육위원회는 제출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건을 보류 결정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교육위원들은 “학생 수혜라는 명목으로 부실한 계획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안이 담긴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전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가 보류된 안건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이다

민주 윤준병 의원, 환경용량

도입 난개발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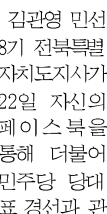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 오염을 정화하거나 복원해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과 평가 항목에 이를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염과 훼손의 절대량 중심으로 판단할 뿐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만호기자·정음=김대환기자

## “명청대전, 이번 전대 통해 종식돼야”

김관영 전 도지사, 민주당대표 경선 관련



김관영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명청대전은 이제 꼭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도지사는 이날 글에서 “오랜만에 폐친들께 인사드린다”며 “도지사직을 그만두고 7월부터 성찰과 여백의 시간을 갖고 있다. 여행하고, 책을 보고, 운동하고, 음악을 듣고, 선거를 도와준 분들을 만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인물을 뽑는 일”이라며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중요한 선거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른바 명

청대전’ 구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전 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대결인 듯 표현되는 이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사망하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사람이지만, 민주당이 잘되어야 대한민국이 잘된다”며 “밖에 나와 보니 대한민국 걱정을 더하게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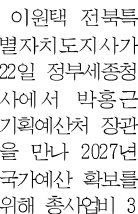
김 전 도지사는 마지막으로 “국민과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끔씩 소식을 전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김 전 도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도지사직에서 물러난 뒤 공개 정치 활동을 자제해왔으며, 이번 발언은 오는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온 첫 공개 정치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 “전북 5대 핵심사업 반영을”

이원택 도지사, 내년 예산 확보 관련 기획예산처 장관에 건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훈관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3조 4,500억 원 규모의 핵심사업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하는 5대 핵심사업은 민선8기 출범 후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장관 면담으로, 도청 핵심 구상을 국가사업과 정부예산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안 편성을 위한 기획예산처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사전타당성 조사비 등 미충족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면 사업 착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 대응이다.

건의 사업은 △새만금 K-푸드 수출 허브단지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합법지는 피지컬AI 혁신캠퍼스 구축 △KGC 특화방 기반 군산조선소 M.AX 실증 플랫폼 구축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등 5건이다. 여기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들어설 거점문화시설 2건의 전액 국가사업 추진도 별도로 요청했다.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는 농생업 융합의 생산 기능에 식품 가공·저장시설과 트라이포트를 연계해 농산품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아

우르는 국가 수출거점이다. 도는 기존 구상 영역에서 경제성이 확인된 만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국가정원은 100ha 이상의 주제정원과 방문자센터를 새만금수목원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녹지 확충과 관광거점 육성을 위해 조사비가 우선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법지는 피지컬AI 혁신캠퍼스는 전북대·현대차 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러닝팩토리를 갖춰 로봇·AI 분야 현장형 인재를 길러내는 사업이다. 군산조선소 M.AX 실증 플랫폼은 5G 특화망에 AI·로봇·드론을 접목해 조선소의 안전·품질·공정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초기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국립식품박물관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K-푸드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전시·체험하는 공간을 만들어 클러스터를 생산과 문화·관광이 결합된 복합거점으로 확장하는 구상이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의 △국립모두 예술문화플랫폼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등 2건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건립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해당 지역이 50년 넘게 국가 지정시설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국제금융센터 협약 해지에도 추진... 납득 불가”

서난이 도의원, 기업유치지원실 업무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은 22일 열린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기업유치지원실 미진 업무보고에서 국제금융센터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투자자의 협약 해지 의사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것처럼 의회에 보고한 것은 심각한 행정 신뢰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2023년 11월 협약 체결 이후 SFC 설립과 최근 업무협약 해지에 이르기까지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며, 핵심 투자자인 파인애플파트너스가 2024년 4월 이미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협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집행부가 같은 해 8월 SFC인 ‘전북국제금융센터(주)’를 설립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협약기반인 전북신용보증재단도 당시 핵심 투자자의 사업 철회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며 “그럼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SFC를 사업 시행주체로 유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근거로 “당시 집행부는 협약기관들이 여전히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핵심 투자자의 이탈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요한 사실을 의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23년 체결된 15개 기관 업무협약의 현재 효력과 협약기관에 대한 해지 사실 공유 여부, SFC 해산 절차 및 현재 추진 중인 금융타운 공모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